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운영

환경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상담실은 '05.1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http://waste.m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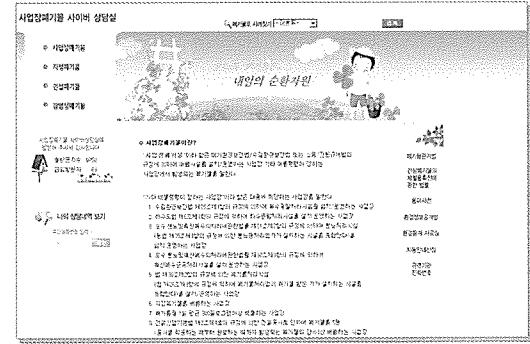
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와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05.5.29) 이후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페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제작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담결과를 상담자의 핸드폰과 개인용컴퓨터로 알려 줌으로써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시스템을 고객 위주로 개선하게 된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질의가 다양하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처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이버상담실의 운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사업장폐기물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상담실 사이트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제 개정

EPR, 폐기물 부담금 등 자원재활용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 조직 구성의 필요성과 인력구조 재정비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직제를 일부 개정하였다.

현 8처 2실 28팀으로 구성된 기구를 조직계층을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본부 16실 1센터로 개편함으로서 전체적으로 현행 5단계계층구조(팀원-팀장-처장-이사-사장)를 4단계로 축소(실원-실장-이사-사장)하였으며, 이사 소관별 분장업무를 설립목적달성에 적합하도록 사업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재조정 및 슬림화를 실시하였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존(8처 2실 28팀)	개편(1본부 16실)
기획관리 이사	•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 경영혁신처 - 경영평가팀, 혁신인사팀, 고객경영팀	• 경영혁신처 - 혁신, 평가, 고객·윤리 경영, 인사 등
	• 관리처 - 종무팀, 회계팀, 안전관리팀	• 경영지원실 - 종무, 노무, 급여, 관제 등
산업지원 이사	• 산업진흥처 - 산업진흥팀, 통계정보팀, 자금융자팀	• 산업진흥실 - 창업, 융자, 통계 등 • 시설지원실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특화단지조성 등
	• 자원순환기술연구처 - 기술관리팀, 기술개발팀, 시험분석팀, 건설페기물관리팀	• 기술연구실 - 기술 개발·지도 등 • 시험검사실 - 시험 분석 및 검사 등
제도운영 이사	• EPR제도운영처 - EPR 제도운영팀, EPR 제도지원팀, 폐기물부담금 운영팀	• 제도운영실 - EPR, 환경정보장제 등 • 부담금관리실 - 폐기물부담금제도 등
	•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처 - 적법처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 감량화팀, 정보화관리팀	• 적법처리실 - 적법처리시스템, 감염성폐기물관리 등 • 폐기물관리실 - 폐기물감량화, 건설페기물관리 등 • 정보화실 - 개발, 유지, 보수 등
재활용사업 본부	• 자원순환사업처 - 사업관리팀, 시설운영팀, 건설페기물관리팀, 해외사업팀	• 사업관리실 - 수거, 처리 등 • 사업개발실 - 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사업 개발 등

기준 감사실과 비서실의 2실은 변동 없음

재활용사업자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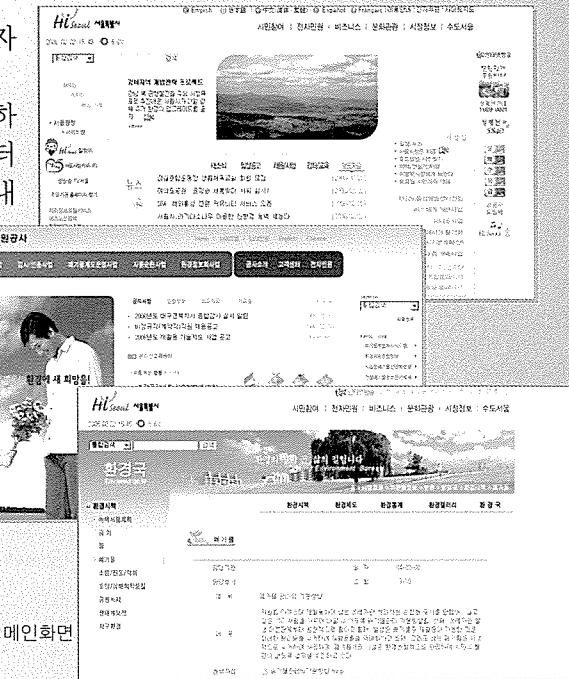
서울시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각각 200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계획함에 따라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자당 시설자금 1억원, 운전자금 5천만원 이내(총 예산 4.5억원)에서 연 0.8%의 대출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2006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가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총 700억원의 융자금액 중 1회 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 50억원 이내, 기술개발자금 4억원 이내, 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3억원 ~ 5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이내 등으로 지원 계획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연 4.42%로 책정되어 있다.

서울시 및 한국환경자원공사 융자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pra.or.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서울시청과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 링크



일반 국민 73%가 다소 비싸도 친환경상품 구매 의향

최근 웰빙(Well-being)과 지속 가능한 소비(LoHAS)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정홍보처와 함께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8%가 평소 친환경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제품과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친환경상품에 대해 일반상품(5만원 기준)보다 20%(5.9원)~30%(6.5만원)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응답해, 환경성과 함께 뛰어난 기능·디자인을 갖춘 친환경상품이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인식도도 71%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환경마크 제품의 우수성과 사용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공감할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환경상품 사용경험에 대한 설문에는 대상자의 21%가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고,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82%)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자의 80%가 인체무해, 환경보전 등의 사유를 들어 친환경상품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불만족 스러운 경험자는 품질을 첫번째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제품과 비교해 품질에 불만족을 표시한 소비자의 경우 품질 보다 환경친화성을 우선하는 친환경상품의 특성에 대해 다소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친환경상품은 일정부분 품질을 확보할 경우 일반 제품과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친환경상품 구매·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①굳이 친환경상품을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서(41%) ②판매하는 곳을 몰라서/판매처가 적어서(33%) ③비싼 가격(12%)을 비구매사유로 들어 친환경상품 확산을 위해 정부와 기업·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향후 수행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친환경상품 선호도를 실제 구매로 연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친환경상품이 가져다 주는 환경·경제적인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